

당심, 민심 그리고 명심



데스크칼럼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seonwook.kim@jnibo.com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거침이 없다. 쟁점법안 입법이나 당헌당규 개정 등 뭐든 속전속결이다.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단일대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변화는 당원권 강화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핵심은 권리당원의 투표권 강화다. 당 지도부를 뽑는 8·18전당대회에 맞춰져 전광석화 같이 당규를 개정했다. 예비경선, 본경선에서 대의원 표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율을 대폭 늘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개정이 이뤄졌다.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했다.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의장은 국회 대표를 대표한다. 국회의원의 자율투표 영역까지 당원들이 개입한다는 건 정말 해괴한 논리다. 중립성을 요구하는 입법부 수장인 의장 후보도 당원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아스럽다. 당 지도부는 이를 '강화'라고 적었지만, '권력'으로 읽혀진다. 국민들에게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뽑는 '투표권'은 없다. 대의 민주주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당의 주인이 주권자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런데는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

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 5월16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명심'(이재명의 의중)을 안고, 강성 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의원은 떨어졌다. 강성 당원들은 결과에 반발해 당 지지 의사를 철회하거나 탈당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2만명 넘게 탈당했다"고 했다. 동요하는 친명 강성 지지층을 달래야 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란 구호였다. 이후 당원권 강화는 선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악이란 이분법적 구도가 당내에 팽배해졌다. 해괴망측한 개정이 이뤄지는데도,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없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은 당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 보면 상호 모순적인 단어의 조합같이 들린다. 당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무리이다. 반면 대중은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불특정의 다수다. 서로 다른 개념이다. 민주당의 '당원 중심'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같다. 만약 이들의 비중이 커지면 전위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추종 집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 당연히 노동자·농민·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대중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당내 다양한 정파가 이탈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외연 확장과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가진 정당과는 거꾸로 간다. 전조 현상은 민심과 당심의 불일치로 나타날 것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을 구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원들은 당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한다.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힘을 실어주려는 속성이 강하다. '전당원 투표제'는 이런 당원들의 순수한 마

음을 나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복하거나, 무리한 결정을 내릴 때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무공천' 당헌을 깨고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공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대가는 최악으로 돌아왔다. 민심과 당심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원을 '도구화'했다. 미리 방향을 정해 놓고 당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전당원'이란 말에 걸맞게 유효 투표율을 올리는 등 그들의 목소리를 울리게 반영하는게 실제적인 당원권 강화가 아닌가 싶다.

과거 민주당은 군부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민주화의 맨 앞에 서서 시민들의 지지 속에 대중정당의 길을 걸어왔다. 대중이 지지하는 정당, 그 것이 민주당의 자산이었다. '김대중 노선'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다. '노무현 노선'은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당원들은 그 길에 줄곧 함께 해왔다. 정당사에서 당원이 주인이 아닌 적은 없었다. 지금도 앞으로도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중심이다. 그래서 당원 중심이란 말은 정치적 레토릭(수사)처럼 들린다. 대중정당으로 가겠다고 당원권도 강화했는데, 민심은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27%였다. 당내에서조차 '분당대회', '자폭전대'라는 자조와 탄식이 나오는 국민의힘(35%) 보다도 낮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가.

社說

더 이상 외연확장 어려운 강성 팬덤 정치

권력집중으로 '민주' 가치 해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조국 대표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됐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흠은 아니다. 하지만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극심한 지금의 일극체제는 권력의 집중을 불러오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인 다양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지난 20~21일 진행된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등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누적 91.70%의 득표율을 얻었다. 도전자인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는 각각 7.19%, 1.11%에 그쳤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에 치우치며 싱거운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20일 실시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국 의원이 99.9%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양당 모두 후보들의 일방적인 우세와 달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곱씹어

볼 일이다.

민주당에서 한 후보의 일방적 독주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북한 김정일을 비롯해 집중된 일극체제가 독재로 흐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당원들의 선택'이라는 주장도 우습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제주에서 치러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3만 1921명 가운데 586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8.39%에 머물렀다. 인천과 강원 지역 투표율도 각각 37.76%와 21.85%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구·경북에서 선전했지만 이 지역 선거인이 2만 2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떨어진다.

외연을 넓히지 못하는 강성 팬덤 정치로 재집권은 요원하다. 역풍으로 이어져 결국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건강한 정당, 재집권을 위한 외연확장을 위한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전과 열정은 사라지고 맹목적 지지만 강요하는 지금 민주당의 '이례적 지지율'은 재집권을 위한 약이 아니고 독이다.

'최하위' 전남 안전지수 5년째 방치 안돼

지역간 안전불균형 해결돼야

전남의 지역안전지수가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2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에 따르면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자살, 범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자체 안전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함을 의미한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를 보면 전남은 자살 3등급, 범죄 2등급,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4등급, 화재와 감염병 분야에서는 5등급을 기록하며 현저히 낮은 안전지수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2년 252명에서 지난해 188명으로 25.4%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등급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자살 및 범죄는 2등급에서 3등급을, 나머지 분야는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는 등 분야별 등급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민선 7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며 지난

해 한 단계 상승한 게 고작이다.

인구 소멸지역으로 몰린 전남도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안전'에서조차 위험 평가를 받는다는 건 크나큰 오점이다. 전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를 내야 함에도 무려 5년간 개선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남도민은 편안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고, 지자체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지자체 별로 하위 등급별 보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전남도가 여전히 중하위권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각성이 필요하다.

지역간 안전 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다. 전남도는 지역안전지수를 면밀히 분석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가뜰이나 열악한 경제기반과 고령화, 청년층 이탈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안전까지 위협 수준에 머문다면 전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1일(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 남쪽 약 70km 떨어진 수니온곶의 고대 포세이돈 신전 뒤로 보름달이 뜨고 있다. 7월의 보름달은 '벅문'(Buck Moon)으로도 불리는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어린 수사슴의 뿔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를 기념해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김민기가 세상을 떠났다. 내 도래는 그와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그리 멀지는 않는다. 그가 만든 노래가 충분히 우리 세대의 토양을 적셔왔기 때문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졌던 '아침이슬'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가끔씩 흥얼거린다. '친구'라는 노래도 그러하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도 이래저래 흘러가는 바람 속에서 들었기에 결코 범상치 않은 이라는 것만은 뚜렷이 기억한다.

어쩌면 불행했고, 어쩌면 행복했을 터다. 청춘을 맞이한 시대가 군부독재의 엄혹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그는 불행했고, 맞서 싸우면서 여기저기 깨져나가는 그 시기엔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승리를 맞보고, 세상이 바뀌었음에 환호하다가도 어쩌면 바뀐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절망도 안아봤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을 것이다.

요즘 몇 해 동안 부쩍 추모가 많아진다. 얼마 전에는 귀가하던 가장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고, 그 바로 전에는 19살 청춘들이 직장과 군대에서 죽어 나갔다. 상관의



명령을 들었던 해병대원이 하늘로 떠났고 더 나아가면, 이 태원 거리에서 수많은 이들이 갑자기 삶의 궤적을 멈춰야 했다.

그들이 사라지고서도 세상은 변한게 없다. 살아남은 이들은 여전히 잘못을 가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 갈등과 혐오는 갈수록 첨예해질 따름이고.

희망마저 약해져 평생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살수 없는 지친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빛에 물린 젊은이들은 구직마저 포기한다. 마약은 10대들까지 파고들고, 요즘 아

이들이 소속되고 1순위인 유튜브 세계에서는 사이버 랙카라는 상어떼들이 먹이감을 찢어 받기다 세상에 그 본모습을 들켜기도 했다.

우리의 세상이 험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방에서 뼈대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2024년 여름, 50여년 전 한 청년이 만든 노래처럼 '태양은 묘지 위로'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추모인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인가.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태양은 묘지 위로

이들이 소속되고 1순위인 유튜브 세계에서는 사이버 랙카라는 상어떼들이 먹이감을 찢어 받기다 세상에 그 본모습을 들켜기도 했다.

우리의 세상이 험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방에서 뼈대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2024년 여름, 50여년 전 한 청년이 만든 노래처럼 '태양은 묘지 위로'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추모인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인가.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bo.com